

분단 반세기와 민주화운동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

1. 돌이켜 보면 한국은 분단 반세기만에 통일을 제외하고는 민주와 진보를 향한 역사적 대장정에서 이제 큰 장애를 걷어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공화국 이름으로 국가가 출범한지 50여 년 만에 이제 그 명목에 알맞은 구조적 틀의 기초를 놓았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는 두 가지 민족적 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 하나는 명실상부한 근대적인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건설되는 민족국가 안팎에 민주주의를 진보적인 형태로 꾸려 가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통일되어 가는 민족국가의 건설에 동반해서 한국의 더 깊고 넓은 민주화 정착이 그 건설의 자주적 에너지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2. 간단히 되돌아 살펴보면 한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 나중에 남북으로 갈려서 '단독' 국가를 건설한 남북의 세력들 모두가 '군주제 국가'의 재현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민족의 인민에 기초한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집중적 착취를 당했던 민족 민중이나 해외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 어떤 세력도 모두 조선조 말기에 나왔던 '신민(新民)'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이념에 기초한 국가의 건설을 희망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자행된 착취에 저항하는 의미와 민족 자주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투쟁해 온 결과이기도 하였다. 전통적 신분으로부터의 해방은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만 가지고도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이중적 해방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3. 한민족은 불행하게도 남북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의 군대에 의하여 분단 점령당하고 이로써 한민족은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남북 각각 국가를 세웠는데, 두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가 대립적인 것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단독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1950년에 발생한 6.25전쟁으로 분단된 반공 친미 정치체제로 발전하였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이념이 반공으로 왜곡되고 친일세력에 기초한 초기 정권은 식민지 말기의 친일 지배블럭 구조를 재생산하였다. 이들의 물질적 기초는 귀속재산과 소비재 위주의 미국 원조에서 제공되었다. 이 친일 지배블럭은 나중에 '순수주의'와 '전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지배블럭을 재생산해 갔다. 순수정치, 순수경제, 순수군인, 순수예술, 순수문학, 순수학문- 이와 같은 순수주의 이데올로기는 70년대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하여 추진된 경제발전의 동원될 엘리트를 '전문주의'의 기반으로 생산하였으며 경제발전의 동원될 노동자를 '산업역군'으로 이름 매겼다. 이 두 순수주의와 전문주의는 반공이데올로기와 융합하여 국가의 기본적 가치 내지 중심적 가치와,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치에 간섭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 혹은 국가기구의 관료나 경제엘리트가 추진하는 경제발전 계획에 대한 비판을 비전문가가 간섭하는 것인 양 억압하고 민중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대변할 정치 세력의 발생을 반공이데올로기 틀에서 억압함으로써 민중에 기초하는 혹은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하였다. 원초적으로 식민주의를 구조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과정에서 친일세력을 제거하지 못한 원죄적인 구조적 요인이 이 세 가지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막고 군부독재 체제를 지탱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기능했던 것이다.

4. 해방 후 중도적 민족주의 세력이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이 철저히 제거되고 6.25전쟁이 또한 전 민족의 민주적 역량을 초토화함으로써 극우 정치세력 외에 어떠한 경쟁적 혹은 대안적 정치세력이나 민중정치세력이 그 발생 성장의 싹조차 피울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의

4.19혁명은 해방 당시의 민족적 과제를 다시 민중적으로 혹은 대중적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두가지가 분명하였다. 첫째 장기적 독재정치는 민중의 대중적 투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자립적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민족국가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명제는 이로써 한국은 근대적 정치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세계에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두 번째 명제는 이미 한국의 경제가 미국 원조경제의 틀로 편입된 체제에 자주적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1961년의 군사쿠데타는 첫 번째 율법을 어긴 것이다. 동시에 민족주의적 자공조차 훼손하면서 일본의 자본을 유입시켜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추구하였다. 첫 번째 율법을 어김으로써 더욱 철저하게 민중의 정치적 성장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내외적 조건에 반응하면서 1972년 전체주의적인 '유신체제'로 이어졌다. 1970년 이미 비농민 도시 거주자가 인구의 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종속적 자본주의의 필요에 동원될 인력은 공식적 교육제도에 의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5. 종속적인 자본주의 경제발전 계획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분화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대공장의 흐름생산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으며 차츰 중간계층도 기능분화에 따라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편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치적인 기본적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간계층은 기능분화에 따라 중앙의 정치 경제에 관한 지시에 동조하기보다도 독자적인 기능적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1979년 유신체제는 부마사태가 빚어낸 위 두 층의 대중적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자체 붕괴하였지만 박 정권에 의해 재생산된 군부세력은 이를 감지 내지 판단하지 못하고 대기업 자본가들과 지배블럭의 판도를 다시 짜면서 정권을 탈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은 5.18 광주에서 '국민'을 학살하는 일련의 잔인한 비극을 연출했던 것이다.

1980년대 더욱 강화된 군부파시트 지배체제는 사회운동의 두 주력세

력인 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중심적 가치 형성문제에서 대립하고 있는 지식인 일반을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5.18광주민중항쟁의 비극성과 진지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에 저항하면서 공단지역과 도시빈민지역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착취에 신음하면서 노동자계급으로서 각성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과 연대하는 길을 찾아나갔다. 군부와 시스트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류 사회과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근대화론에 인식론적 단절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학문·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맑스주의와 변혁론적 인식론을 도입하여 이를 전파함으로써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과 군사적 파시스트정치지배에 대항하는 변혁적 인식론과 실천력을 담보해 내하고자하였다.

1985년 대우 자동차 노조의 파업투쟁은 80년대 초반 마창 공업지대와 수출자유지대에서 줄기차게 저항해 왔던 노동운동을 대기업 대량생산체제의 장으로 옮기면서 중화학공업의 핵심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강고한 노동자계급의 존재를 들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구로연대파업이 발생하였다. 군부지배세력은 두 가지 집단적 저항세력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학생 중심으로 하는 저항세력과 노동자계급 세력이었다. 냉전체제에 기초하는 분단체제가 안보지배체제를 국가체제로 구성하였다면 이 안보지배체제가 균열을 일으킨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의 폭로였다. 거대한 군부 안보지배체제의 댐에 균열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삼아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7-8월의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됨으로써 전국 차원에서 군부지배체제에 대하여 민중의 저항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6. 1980년대 후반 드디어 큰 범주의 주체가 사회적으로 출현했다. 노동자가 가져야 할 기본권인 노동3권 가운데 우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90년에 들어서면서 전국 차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조직이 결성되었다. 대학생들은 국가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던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자주적인 총학생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변혁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구성되었다. 농민과 빈민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존재로 조직적으로 결집하였다. 지식인들은 교수, 종교인, 예술가, 언론인, 출판인 어느 범주 어느 것이든 모두가 자주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상징과 가치의 형성에 적극 나서는 세력을 만들어내었다. 금기되었던 통일문제와 북한문제를 민족차원의 과제로 제기함으로써 민족 주체 의식을 갖게 되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이에 대항한 사회주의 독립투쟁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을 자본주의의 전세계화 차원과 군사패권주의 차원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사회운동 실천 차원의 전략적 전술적 방책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동시에 화이트칼라 중간층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편으로는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자로서의 주체 의식을 갖고 권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광범한 '시민'의 출현 주역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시민의 출현으로 '시민사회'를 상정하게 되었으며 국가나 정치지배력에 일정하게 대치하는 지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시민사회라는 공적 영역을 정치적 권력들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삼으면서도 정치적 기본권이 담보되어야 할 지대의 애매성 때문에 시민운동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시민도 하나의 주체라는 관념을 낳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이 시민권으로 동일시되는 역사적 기반이 서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주체들이 형성되어 정치적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정치블럭은 군부세력으로부터 민간정치세력으로 그 표면적 대표성이 바뀌었을 뿐, 기존 군부정치세력을 완전히 대치하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저항 정치인들 또한 장기적인 군사지배 정권세력과 대치해 온 과정에서 지배권력의 양태에 '역동일시'하는 습속을 익혀서 정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민주화를 추구하기 어려워서 광범한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로써 문민정권이 2대를 이어 소위 질차적 민주화를 진행시켰다는 평

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과의 괴리와 적대관계를 일정하게 항상 전개하고 있다.

7. 1990년대 중반에는 80년대에 큰 범주로 나타난 주체들의 정치적 요구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제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큰 범주 외에 그 아래 여러 범주의 '주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소수'적인 양태이지만 자신들의 존재양식 획득을 위해 독자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적 요건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국민, 민족, 계급, 여성, 어린이라는 큰 주체의 범주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대적 인간'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규정으로 억압되어 왔던 작은 주체들의 정치적 요구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부로서 현모양처로 규정되었던 여성은 여러 범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였다. 주부,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모성, 이혼녀, 미혼모 등으로 나누어져 각 존재의 사회적 의의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어린이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중·고교 학생층)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양육과 자율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노인들도 자손과는 별도로 독자적 생활을 위한 터전을 요구한다. 민족은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외에 해외동포, 조선족, 해외 입양아 등이 주권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민족 범주에 월남민이 이미 체제 내화된 개념이라면 탈북자 내지 북파 요원은 그들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등장하여 동등한 노동3권과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국내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귀속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성애자가 그들의 정상적인 존재양태를 주장한다. 장애인(단지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교통사고 및 군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까지 포괄하여)은 도시와 교통과 건물이 이들의 존재를 외면한 채 설계되고 건설됨으로써 그들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이 절박하게 주창되기 시작하였다. 매춘부의 생존권도 주창된다. 죄수들의 권리, 양심수의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주창된다.

이들 작은 주체들 중에는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지만 투표권·피선거권이 없거나 참정권 행사에서 자신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다수층이 있기도 하고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권리가 외면 당하는 경우도 많다. 양육과 교육의 한 당사자인 청소년과 어린이는 어른들 혹은 기존 지배블럭으로부터 존재양태가 규정되기만 하고 그들의 욕망을 정치적으로 반영할 사회적 기제가 없다. 어른들이나 기존 기득권세력은 이들을 규정하는 데 매달려서 공교육보다도 사교육에 매달린다.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출생을 억제한다.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인구의 절반 정도에 참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이하의 연령층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 욕망을 가지고 있고 표출하고 싶어하는 바 주체성과 그 욕망을 나누는 집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주체인 국민, 민족, 시민이라는 범주에 일체하기를 훈육되고 있다. 이들의 욕망을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정치적 메카니즘이나 정당이 없다. 기존의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정치체제는 이미 독재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면모만 보여주었을 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제도/인식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작은 주체들은 그들의 욕망을 키우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싶어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이를 추동하고 있다. 대중매체가 전지구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 이 연결망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 연결망은 세계화를 밀고 가는 거대자본의 상징적, 이데올로기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전지구적 매체들은 자본주의적 욕망을 부추긴다. 돈을 추구하는 동시에 소비를 욕망의 메카니즘으로 삼도록 한다. 욕망과 소비에 대한 중세기적 혹은 계몽적 절제를 걷어 내고 각 아래 주체들의 욕망을 향하여 특정화된 상품을 공급하여 소비를 추구하게 한다. 이 기능에 있어서 국내 대중매체도 경쟁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독재정치체제에의 동조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해 왔던 전통적 역할에 보태어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에도 각 주체별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작은 주체들은 잘 발전되고 있는 인터넷 소통망을 이용하여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발견해 내어 소통하고 '작은' 집

단을 쉽게 형성함으로써 주체의식을 키운다. 이러한 작은 주체들은 기존 정치체제에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고 싶어도 쉽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운동 주체로 나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끼리의 소통과 연대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이리하여 기존 정치체제로부터 이탈해 나가기도 한다(언뜻 정치적 무관심인 양 해석되기도 한다).

8. 한국 국민은 97년 이후 전지구적 통합자본주의의 실제적 힘을 IMF 관리체제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절감하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존재를 형성해 왔지만 자본가계급으로 하여금 노동과정에 극소전자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노동력을 생력시켜 왔지만 번번이 대중적 노동운동의 저항에 부딪쳐 왔다. IMF 관리체제는 국내 자본의 국제연대적 혹은 종속적 병탄(併呑)의 존재 규정을 강화하였지만 한편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다수 노동자들을 노동과정에서 제거하여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이는 87년 이후 발전해온 한국 노동자계급의 강고한 대중투쟁을 무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직적 결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취업자의 60%가 비정규직이고 또한 이들의 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이며 앞으로 이들이 영세사업장에 취업할 것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 대공장이나 전문적 기술 경영부분의 핵심 노동자 혹은 핵심 종사자는 소수의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저소득의 불안정한 노동자로서 불안정한 생활에 내몰리며 그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국가는 이들의 안정망을 위한 어떤 정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혹시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형식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

9. 다른 하나는 분단 반세기만에 드디어 남북한이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정권은 그 지배의 위기마다 민족문제를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 끌어들여서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신, 민족통일문제에 관한 한 지배정권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7.4남북선언 이후 계속된 남북한 정부간의 선언들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방 당시 당연하고 자연사적으로 하나의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과제를 피지배 민중들로 하여금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분단 대결의 비용이 너무 큰 것과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의 폐단이 서로 상승적으로 민중생활과 민중의 정치적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이 절곡을 민족통일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여망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경제개발 정책이 자본가계급의 성장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이 자본가의 성장에는 분단에 의한 냉전적 구조 아래서 노동자를 억압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 대단히 유효하였다.

한편 성장한 자본이 국내의 자본과의 경쟁을 하면서도 해외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중동지역으로, 다음에는 동구 공산권국가와 중국으로 시장을 개척·확장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재빨리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북한이 경제발전의 필요에서 외국 자본에 개방을 해야 하는 단계에 온 것과 세계적 자본주의의 확장이 북한을 향해야 하는 조건이 맞물리면서 남한 지배블럭은 자본가를 앞세워 북한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한 민중의 절곡을 헤쳐 가는 하나의 돌파구로 성장한 민중의 힘으로 북한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였다. 민중의 통일운동은 남한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파시스트적 지배의 절곡과 자본주의 모순을 동시에 돌파하는 하나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국가의 지배정치권력은 그것대로, 거대독점자본은 자체 논리대로, 그리고 민중은 민중의 소망대로, 그리고 이산가족이라는 비극적 존재는 그 자체의 한풀이대로 남북한 사이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게 되었다. 남북한 사이에 전개되는 자본의 작동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것마저 민족 '동포애'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 민중의 민주화운동 맥락에서 보자면 남북한 통일의 장정은 민족 전체, 민족 민중 전체에 '진보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과제이다. 남한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 체제에 줄곧 저항해온 민주노

동운동의 전통이 북한의 자본주의 만남에 지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제 역시 종전에 전개해온 민주화운동의 심화·발전에서만 전망될 수 있는 부분이다.

10. 위와 같이 논의하면서 민주화운동은 거대구조에서의 주체형성과 관련하여 한 순환을 거치고 세계화된 통합자본주의가 새롭게 한민족 전체 사회에 미치는 거대 효과에 대응하는 바,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이는 특별히 한국민족에게는 통일 과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내었다. 한편 작은 주체들이 그들 존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종전 생활 양식의 생산과 재생산에는 훼손을 주면서 그들 존재의 존속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민주화 차원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의 심화 확대문제에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하겠다. 극소전자기술의 발전이 생산·유통·소비의 전 영역에 광범하게 적용됨으로써 노동력을 생산과정에서 생략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동시에 사이버세계에 새로운 주체로서 '네티즌'을 생성시켰다. 이 네티즌은 주체와 관련하여 특별한 특징을 갖는다. 근대민족국가가 이성적 계몽에 근거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중심적 가치에 동일시하게 훈육하고, 평평한 가치관에 일관하기를 요구하였고 그렇게 일치된 인격을 존중하였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가 분명하고 지속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에서도 사회전반에 중심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그 중심적 가치의 새로운 형성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이버세계의 네티즌은 단일한 주체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단일한 주체가 사이버세계에서는 욕망대로 그 욕망을 억압함이 없이 다양하게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체들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상의 한 주체가 사이버세계 내에서 여러 주체를 만들어 내어 그 주체별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주체와 객체가 수시로 전환되기도 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잡동산이(雜同散異)로 존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한 사람이 사이버세계에서 여러 주체로(그 주체들끼리 적대 모순되더라도) 활동할 수 있다. 그 주체들이 새로운 운동양상을 연출할 수 있다. 남자 어른이 어린 계집애로, 성인 군자가 조폭처럼, 남자가 여자처럼, 여성이 남성처럼, 이성연애자가 동성연애자처럼, 애국자가 배반자처럼, 극우파가 극좌파처럼 무수하게 다양한 주체로 둔갑해서 그대로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술이 개발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어떤 정치적 자세를 취하던 혹은 사회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는 운동대상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주는 집회 시위를 사이버 안에서 전개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의 질서 재생산에 손실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프와 온의 라인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서로 전략적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결합할 경우 해방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작은 주체들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11. 세계적 자본주의는 투자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 세계화는 종전의 국민국가형태를 분화시키고 다양한 인종양태로 분화시키기도 한다. 동시에 상승적으로 통합시키기도 한다. 소련과 유고는 분화된 양태이고 유럽연합은 상승적 통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남북한은 통합적 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세계화는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를 의미하고 있다. 동시에 우주적 군사관리체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화와 지구화는 생산의 과정을, 그리고 유통과 소비의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포괄한다. 정보와 투자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소통되고 기획된다. 국민국가형태에서 형성하고 간직했던 생활양식 내지 문화양식을 해체해서 이윤의 대상으로, 획일적 상품화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각 사회단위에서 귀중하고 보람있던 가치 매김이 화폐의 수량단위로 강제적 전환을 하게된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의 제국이 건설된다. 다자간 투자 협정안은 이러한 제국 건설의 설계도이다.

12. 세계화와 지구화를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에서 생각해 보면 '원통(圓通)'적 인식차원에 있기도 하다. 지구 어느 위치에서든지 그 위치가 중심 주축이다. 이 원통적 사고는 지구촌 인류를 수평적 관계로 사고하게 한다.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획일화한다는 것은 인간을 수직적으로 위계화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2차대전 후에 발전한 핵무기의 우주적 관리체제에 의하여 우주공간 수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이 지구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세계화를 수직적 위계조직으로 정치적 패권체제를 지향한다. 자본주의는 원통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착취'가 있게 한다. 지구를 하나의 우주세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한 개체라고 인식하여 원통적 단일개체로 인식해 간다면 그 속에 있는 구성요소로서의 주제들은 차이로서 균형을 이룬 것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기술발전은 이미 하루 4시간의 노동만으로도 현존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간노동보다도 기계노동에서의 생산성이 능가하고 있다. 이 기계생산성에 의해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에 매달리지 않아도 생산을 진행하고 이윤을 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하여금 고용의 기회에 매달리게 하고 고용을 통해서 얻는 임금소득에 전적인 생계를 의존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자본가 중심의 지배불력이 장악하고 있는 생산양식 혹은 생활양식의 생산과 재생산에 복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계생산에 의한 부의 분배는 지배불력과 피지배불력과의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적 투쟁의 문제이다. 투자의 제국은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유발할 것이다.

지구화의 어떤 위치에 있는 큰 주체들, 그리고 무수한 작은 주체들은 그들 존재 능력에 의하여 존재 영역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작은 주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자주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위한 집단적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하면 할수록 전체에의 획일적 일체성을 재생산하려는 기존 지배질서 즉 세계적 통합자본주의의 생산-재생산 질

서에 저항하고 상처를 주는 효과를 자아낼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되 원통적 사고를 해 나가는 것, 작은 주체들조차 '민중'의 개념에 넣는다면, 아직은 민족국가 형태 안에 있는, 그리고 한국민족처럼 통합되어 가야 하는 마지막 완성의 민족국가 형태 안에 있는, 민중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주체들 사이에 정치적 패권과 경제적 착취가 배제된 상자이생(相資以生)의 길을 뚫어 가게 되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